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2012년 완료 준비

이전기관 부지 매입 능력 연쇄 차질

개발공사 자금난 일반용지 매각 지연 정부·관계부처 나서 이전 독려해야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늦추면서 혁신도시 전체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계획은 2010년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혁신도시 현 공정률 = 토지보상은 이미 97%가 마무리 됐고, 전체 9개 공구 중 1-1공구와 1-3공구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1-1공구의 경우 30%의 부지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3공구는 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7개 공구는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다.

◇이전 기관 부지 매입 '제로' = 나주 혁신도시시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한전 KPS·한국전파진흥원 등 총 1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혁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한전은 토지매입 계약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난해 적자 경영 등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당장 부지 매입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KPS, 전력거래소 등 이미 지방 이전계획이 승인된 한전 자회사와 다른 이전 기관들도 핵심기관인 한전의 계약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후속 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부지 매입 계약 왜 늦추나? = 한전 등이 부지 매입 계약을 늦추고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경영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한전이 서울 강남의 현 본사 부

지인 '한전 강남터' 개발 등 부동산 직접 개발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 불거졌던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축소 또는 변경 움직임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늦추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전 및 자회사의 분할 매각이 추진돼 민영화될 경우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건설 지원단 관계자는 "한전 등 이전 기관들이 정권 교체로 인한 혁신도시 건설 축소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 김상수 한전 사장은 "하반기에 (본사 사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점 및 파장은 이전 기관들의 부지 매입 계약 체결 능력으로 인해 혁신도시건설 주

■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용지 계획

구분	면적(㎡)		구분	면적(㎡)	
	한국전력공사	149,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702
에너지	한전KDN	56,258	농생명	한국농촌공사	115,466
	전력거래소	44,119		농업연수원	71,185
	한전KPS	52,894		농수산물유통공사	18,757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	59,16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193
정보통신	전파연구소	45,600	문화예술	저작권위원회	5,419
	한국전파진흥원	28,863		시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10,91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4,143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10,50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5,855		산학연클러스터	360,178

체인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이미 발행한 토지보상금을 회수하지 못해 이차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

또 부지 매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형 개발 발주사업 유찰(1-2공구) 및 일반용지 매각에도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병원·연구소 등의 유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나서야 = 2012년 완공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한전 등 이전 기관들이 올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는 청사 설계작업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이럴 경우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청사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국회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 부지 매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의지를 갖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한전을 포함한 지방이전 선도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도록 관계부처의 추진상황 확인 등을 독려하도록 건의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들의 부지매입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사진은 지난해 혁신도시 부지에서 열린 이전대상 기관 임직원 설명회.

이대통령 고강도 농업개혁 예고

"한국 농업 변해야"...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합의

지 말고 농촌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왜 농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같이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다니느냐", "농촌을 살리는 데는 여야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농업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주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개혁의 모델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를 지목했다. 정부 보조금을 없애고 자율적인 경쟁력을 살려 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뉴질랜드 등의 성공사례를 참고로 하되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조만간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도높은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곧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FTA 협정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타결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영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협력약정에 따른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관광 진흥과 양국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91개 법안 처리

F1지원법 4월 국회로 박람회 개정안은 통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역 현안 법안 가운데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극적인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던 F1(포들러 원 국제사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은 지난 2일 여·야·정 심야 법안협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3일 국회는 입법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행정법안인 저작권법, 금산분리완화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포함한 91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 분리의 빚이 풀리고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에 따라 기업 자본 유입에 의한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 등

대기업 은행업 진출

출자총액제한 폐지

한나라당 단독 처리

난 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에 대해 직업 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박람회 주제 관련 체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박람회 '직접시설'에만 해당하던 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원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3일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을 위해 광역경제권 등의 개념을 도입하되 광역경제권 사업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행

을 통해 광역경제권 권역을 설정할 때는 국

회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사전 협의만으로는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변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극적으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던 F1 지원법의 경우, 결국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초 F1 지원법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2일 열린 여·야·정 심야 법안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F1 지원법은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으나 2일 밤 열린 여야 정 법안 심의 과정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그러나 F1 지원법에 대해 여야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